

# BDI 정책포커스

## 美·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영향 전망과 부산의 도전과제( I )

※ 「對미국 수출기업의 통상 영향과 출구전략(II)」 2월중순 발간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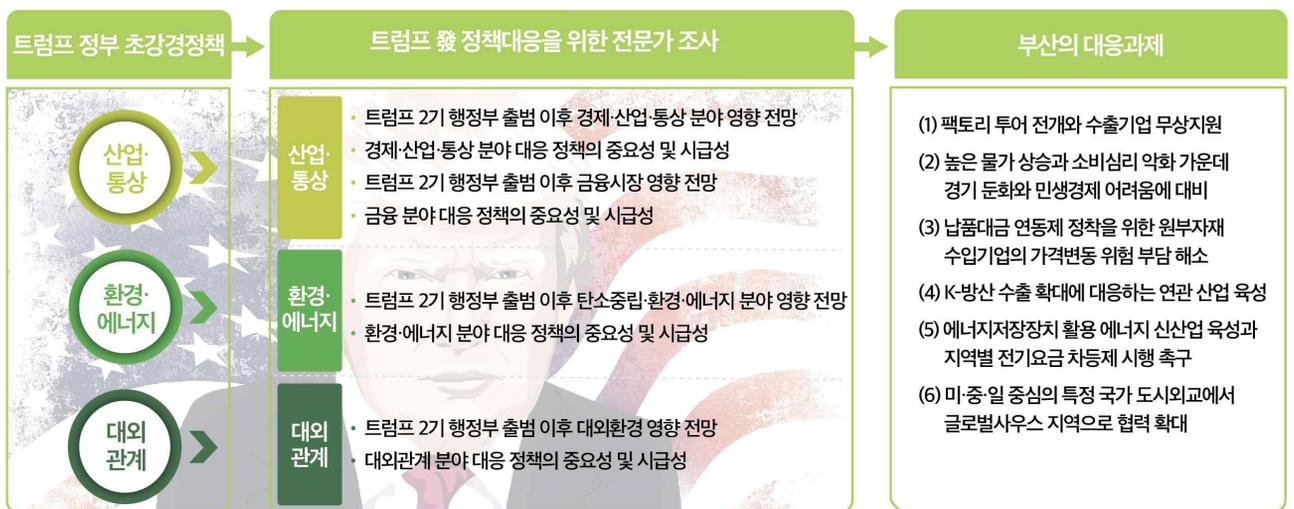
- I.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급진적 정책 변화
- II. 트럼프發 정책 대응을 위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III. 부산의 대응방안

부산연구원  
홈페이지



요 약

- 2025년 1월 20일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임을 내세우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전 세계 주목 속에 출범
- 국제사회는 트럼프 정부가 초강경 ‘관세’, ‘반이민’ 정책과 ‘거래적 관점의 동맹 관계’ 설정을 예고하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부산지역에 미치는 영향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부산연구원의 연구·기획 자문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 조사내용은 미래 전망 시나리오와 정책 분야별 영향 및 대응 방안, 부산광역시의 미래 전망 및 대응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 분야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은 경제·산업·통상·금융 분야, 환경·에너지 분야, 대외관계 분야로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초강경 정책’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 (1) 팩토리 투어 전개와 수출기업 무상지원
  - (2) 높은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 가운데 경기 둔화와 민생경제 어려움에 대비
  - (3)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을 통한 원부자재 수입기업의 가격변동 위험 부담 해소
  - (4) K-방산 수출 확대에 대응하는 연관 산업 육성
  - (5) 에너지저장장치 활용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촉구
  - (6) 미·중·일 중심의 특정 국가 도시외교에서 글로벌사우스 지역으로 협력 확대 등을 제안



## I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급진적 정책 변화

## 1 전세계에 몰아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폭풍

-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존 트럼프(Donald John Trump) 미국 대통령의 공식취임과 함께 후속 정책에 국제사회의 이목 집중
-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우선시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표방은 전세계 경제·산업·통상·환경·안보 분야 지각변동을 예고
  -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국과 공조, 국제협력 관계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
- 트럼프의 대내외 ‘초강경 정책’ 추진은 미국의 정치·경제 지형을 바꿀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거센 후폭풍 예상
  - 초강경 관세, 반이민 정책과 대중국 압박 정책은 국제사회 변화 및 충돌 우려 제기
-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귀환은 한국 그리고 부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분석 및 복합 영향성에 따른 대응시각 모색 필요
  - 여기에 국내 정치 상황과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되면서 지역경제까지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성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 실행이 요구

## 2 트럼프發 과격 정책 본격화

## 1) 무역과 투자: 높은 무역장벽과 제조업 유치

- 중국산 제품에 60% 그리고 우방국도 예외없이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 상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
  - 트럼프 정부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일자리와 부를 되찾기 위해 ‘관세’ 카드를 활용
- 해외 소재 미국기업의 제조·생산시설을 자국 내로 리쇼어링(Reshoring), 해외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등으로 미국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
-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등 탄소감축 신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내 청정에너지 기술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했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폐기 또는 축소 전망

## 2) 환경과 에너지: 탈탄소화와 전기차 정책 변화

-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파리기후협약의 (재)탈퇴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이미 전 세계의 산업 구조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재편되었고, 국제 협상 무대에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는 체계가 구축되어 미국의 협약 탈퇴가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공존
-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를 활용한 풍족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은 재생에너지 산업 후퇴할 전망
-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부활 명목으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 공약은 향후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도 폐지할 것으로 전망

## 3) 대외관계: 국제안보에서 군사적 융통성 강화

-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거래적 관점의 동맹 관계’ 관점에서 한국·일본에 더 많은 방위 분담금 요구
- 트럼프發 ‘안보무임승차론’은 NATO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증액함에 따라 K-방산 수출이 활성화될 전망
-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협상과 전후 재건과정에 참여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 전망

〈트럼프의 재선공약 ‘Agenda 47’〉

분야	세부 내용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중국과 러시아 기업 추가 규제</li> <li>• 공정 무역 적용(무역관세 증대, 수입관세율 등가주의 적용, WTO 최혜국 대우 폐지 등)</li> </ul>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율 인하(현 21% → 단계적으로 최종 15%까지) : 기업의 리쇼어링 추진</li> <li>• 소득세율 단순화(10~37%의 다단계 구조를 15%와 30%로)</li> <li>•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을 위한 증세 법안 폐지</li> </ul>
환경·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 폐지, 원자력 산업에 대한 규제 및 인허가 업무 간소화</li> <li>•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규제 완화(휘발유 가격 인하 및 남는 석유 수출)</li> <li>•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민간의 자율적 성장 기초</li> </ul>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li> <li>• IMF, 세계은행, OECD 탈퇴</li> <li>• 정부 관료 고용 유연화</li> <li>• 한국과 직접적인 정책으로는 미군 철수 문제(방위비 증액)와 조선업 관련 발언 등</li> </ul>
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국경개방 종료 및 불법이민자 추방정책 실시</li> <li>•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를 한 사람들에 대한 미국시민권을 인정하는 현행법 수정</li> <li>• 불법이민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여권, 사회보장번호 발행, 사회복지제도 이용을 모두 제한</li> <li>• 미국 시민권 취득 제한</li> </ul>

자료: 트럼프 대선 공약집 ‘Agenda 47’

## II

## 트럼프發 정책 대응을 위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부산지역에 미치는 영향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 조사 내용 : 미래 전망 시나리오와 정책 분야별 영향 및 대응 방안, 부산광역시의 미래 전망 및 대응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 분야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은 경제·산업·통상·금융 분야, 환경·에너지 분야, 대외관계 분야로 구성
- 조사 대상과 방식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문가 대상 전화, 이메일 조사
- 조사 기간 : 2024년 12월 18일 ~ 2025년 1월 6일(20일간)
- 조사 대상 및 표본 : 부산연구원의 연구·기획 자문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116명 대상으로 진행 하였으며 이 중 73명의 유효 표본을 확보

## 〈전문가 조사 내용〉

구분	내용	
미래 전망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적 관점의 산업(통상)·환경·대외관계 분야의 거시적 전망</li> <li>• 이상적 관점의 산업(통상)·환경·대외관계 분야의 거시적 전망</li> <li>• 그 외 예상되는 거시적 변동 축</li> </ul>	
정책 분야 영향 및 대응 방안	경제·산업·통상·금융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산업·통상 분야 영향 전망</li> <li>• 경제·산업·통상 분야 대응 정책의 중요성 및 시급성</li> <li>•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금융시장 영향 전망</li> <li>• 금융 분야 대응 정책의 중요성 및 시급성</li> </ul>
	환경·에너지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탄소중립·환경·에너지 분야 영향 전망</li> <li>• 환경·에너지 분야 대응 정책의 중요성 및 시급성</li> </ul>
	대외관계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환경 영향 전망</li> <li>• 대외관계 분야 대응 정책의 중요성 및 시급성</li> </ul>
부산광역시의 미래 전망 및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광역시 입장에서 유리한 경제·환경·대외관계 분야의 거시적 전망</li> <li>• 부산광역시의 가장 시급한 대응 과제</li> </ul>	

주: 설문조사의 일부 내용(회색)에 한정하여 본문에 소개

## 2 트럼프發 정책에 대한 분야별 영향 전망

### 1) 산업·통상 분야 영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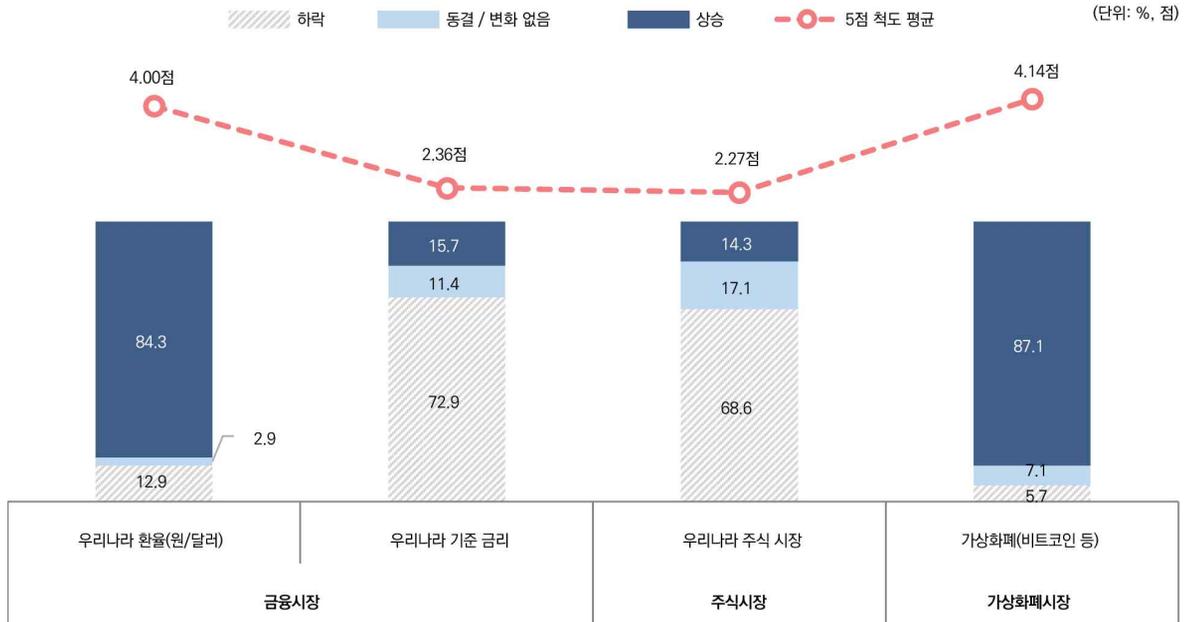
- 조선, 기계, 인프라 분야 관련해서 성장 전망을 높게 평가
  - ‘(조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 변화로 에너지 운반선 수요’기 3.79점, ‘고율관세 적용된 중국산 부품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 3.56점, ‘(기계) 화력발전 설비투자 증가로 관련 기계부품 수출’ 3.50점 등의 순으로 수출과 성장 전망을 높게 평가
- ‘(에너지) 화석연료 공급 확대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자동차) 전기차 지원 축소와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수출’, ‘(철강) 미국 철강산업 보호와 자국 생산 기조로 철강 수출’ 분야는 축소(후퇴)되는 것으로 평가해서 트럼프 정부에서 수출과 성장에 어려움 예상



### 2) 금융 분야 영향 전망

- 원·달러 환율 1,500원에 임박한 달러 강세 등 외환·금융시장 과도한 불확실성 제기로 수출의존도 높은 기업 영향성 높을 것으로 전망
- 금융 분야 이슈 관련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가장 높음
  - ‘가상화폐(비트코인 등)’가 4.14점, ‘우리나라 환율(원/달러)’ 4.00점, ‘우리나라 기준 금리’ 2.36점, ‘우리나라 주식 시장’ 2.27점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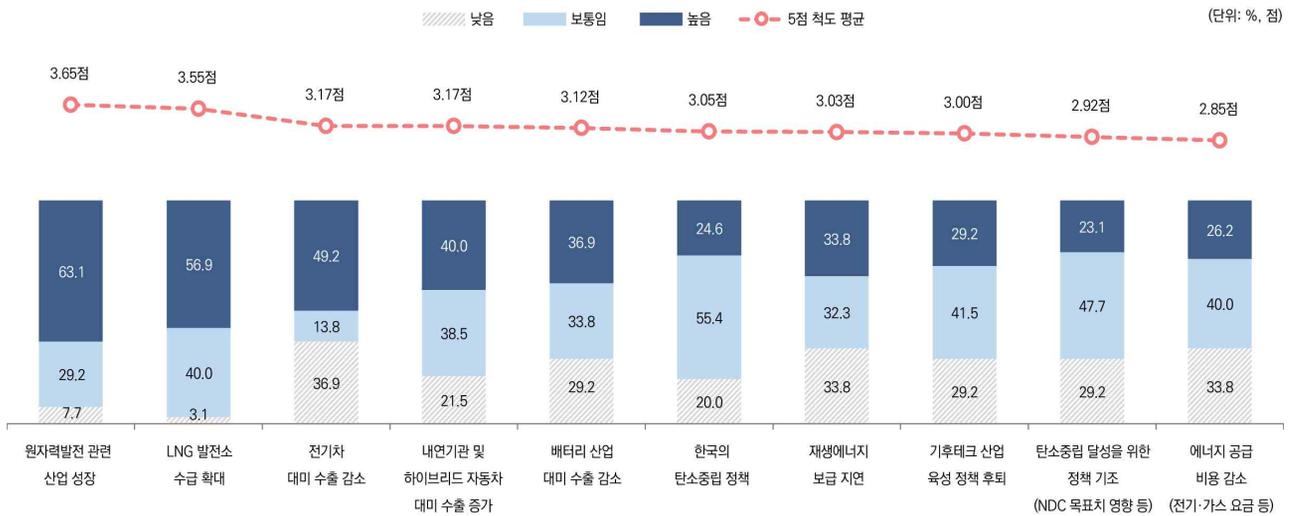
〈금융분야〉



3) 환경·에너지 분야 영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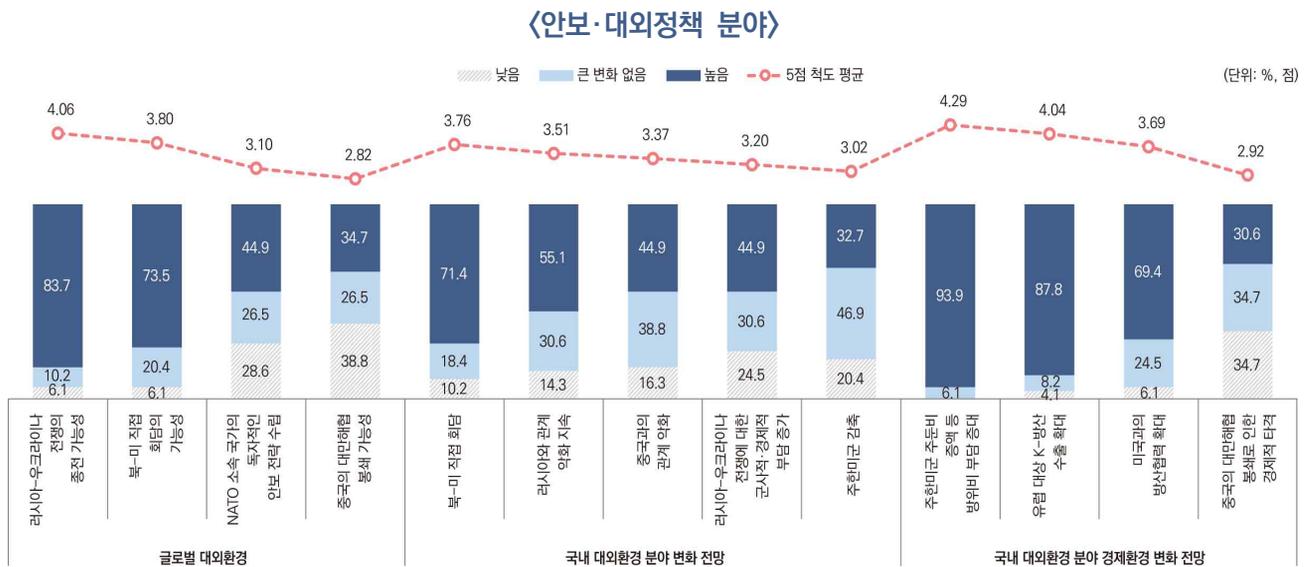
- 환경·에너지 분야는 ‘원자력발전 관련 산업 성장’이 3.65점, 다음으로 ‘LNG 발전소 수급 확대’ 3.55점, ‘전기차 대미 수출 감소’와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대미 수출 증가’ 각 3.17점 순으로 시장 영향성이 클 것으로 전망

〈환경·에너지 분야〉



#### 4) 대외관계 분야 영향 전망

-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등 방위비 부담 증대’가 4.29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 4.06점, ‘유럽 대상 K-방산 수출 확대’ 4.04점 순으로 시장 영향성이 클 것으로 전망



#### 5) 세계질서의 역학 관계 변화 전망

- 현실적·이상적 관점의 괴리를 살펴보면 모든 분야에서 현실적 관점과 이상적 관점이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므로 전문가들은 트럼프 쏘 정책 영향 파급력을 크게 느끼고 있음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존과 변함없는 동맹국 관계설정’, ‘자유무역 확산·활성화’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정책’ 기조가 유지되기를 기대하지만 실제 현실은 이와 반대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
  - (현실적 관점에서) 가까운 미래(2년 이내)에 등장할 가장 유력한 방향으로는 ‘보호무역 강화’가 더 유력하다(95.9%), ‘환경보호 규제 완화’가 더 유력하다(53.4%), ‘거래적 국가동맹 체계 등장 및 강화’가 더 유력하다 응답(83.6%)
  - (이상적 관점에서) 가까운 미래(2년 이내)의 현실에 등장하길 바라는 세계질서 체계의 방향으로는 ‘자유무역 강화’가 더 바람직하다(78.1%), ‘환경보호 규제 강화’가 더 바람직하다(75.3%), ‘기존 국가 동맹 체계 강화’가 더 바람직하다(47.9%)라고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



### 3 IPA 분석을 통한 중요성·시급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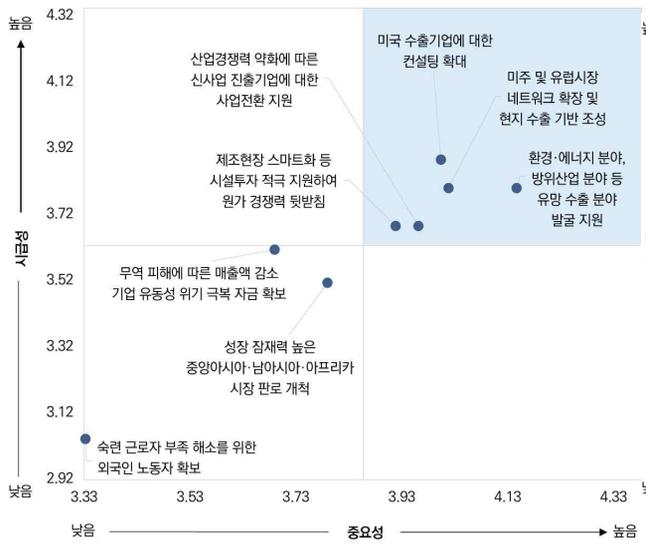
#### 1) 산업·통상 분야 정책 추진의 중요성·시급성 평가 결과:

- ① ‘미국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확대’, ② ‘환경·에너지 분야, 방위산업 분야 등 유망 수출 분야 발굴 지원’, ③ ‘미주 및 유럽 시장 네트워크 확장 및 현지 수출 기반 조성’, ④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신사업 진출기업에 대한 사업전환 지원’, ⑤ ‘제조 현장 스마트화 등 시설투자 적극 지원하여 원가 경쟁력 뒷받침’은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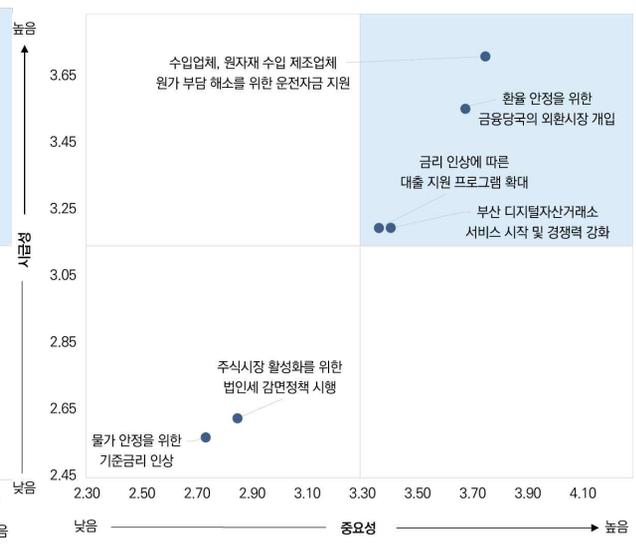
#### 2) 금융 분야 정책 추진의 중요성·시급성 평가 결과:

- ① ‘수입업체, 원자재 수입 제조업체 원가 부담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② ‘환율 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③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대출 지원 프로그램 확대’, ④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서비스 시작 및 경쟁력 강화’은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

〈산업·통상 분야 정책 추진의 중요성·시급성 평가〉



〈금융 분야 정책 추진의 중요성·시급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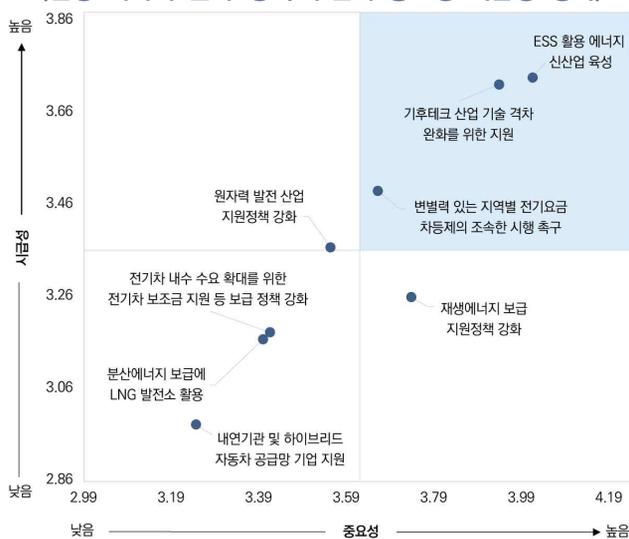
3)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 추진의 중요성·시급성 평가 결과:

- ① 'ESS 활용 에너지 신산업 육성', ② '기후테크 산업 기술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③ '변별력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조속한 시행 촉구'은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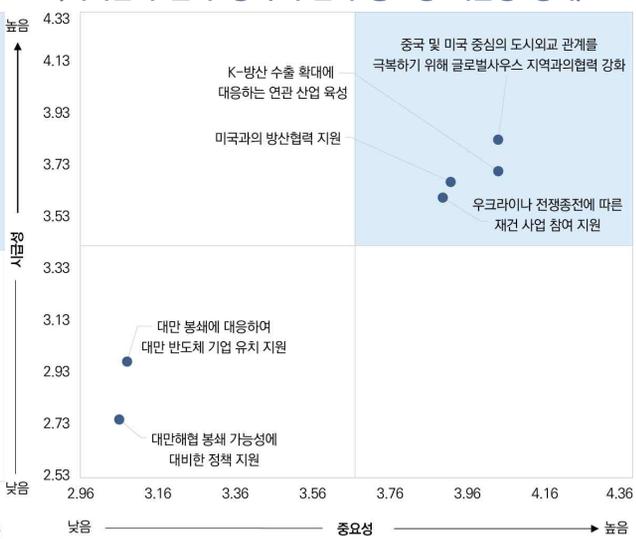
4) 대외관계 분야 정책 추진의 중요성·시급성 평가 결과:

- ① '중국 및 미국 중심의 도시 외교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사우스 지역과의 협력 강화', ② 'K-방산 수출 확대에 대응하는 연관 산업 육성', ③ '미국과의 방산 협력 지원', ④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따른 재건 사업 참여 지원'은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 추진의 중요성·시급성 평가〉



〈대외관계 분야 정책 추진의 중요성·시급성 평가〉



〈정책 추진방안별 ‘중요성·시급성’ 도출과 세부 추진 방안〉

	정책추진의 중요성·시급성에 동의	세부 추진 방안으로 고려
산업 · 통상	미국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 현지 통상자문단 확대와 연결</li> <li>국가별 수시 상담·자문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설</li> </ul>
	제조현장 스마트화 등 시설투자 적극 지원하여 원가 경쟁력 뒷받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투자 지원금에 자부담률 최소화</li> <li>AI 관련 IT 기술, 네트워크 및 인력양성과 연결</li> </ul>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신사업 진출기업에 대한 사업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 부가가치 및 혁신 역량 향상을 지원</li> <li>제조업의 디지털,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첨단제조업 육성</li> </ul>
	미주 및 유럽시장 네트워크 확장 및 현지 수출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푸드·화장품·의료기기 등 현지 인기·수요에 부합하는 수출경쟁력 높은 제품의 마케팅 강화</li> <li>EU 탄소규제 무역장벽 해소 컨설팅 등 전문가와 자문(그룹) 확대</li> </ul>
	환경·에너지 분야, 방위산업 분야 등 유망 수출 분야 발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소재·부품산업 등 신산업 육성</li> <li>지역 연관산업 대상 컨설팅 및 기술개발 지원</li> </ul>
금융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대출 지원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시행</li> <li>대환대출 인프라 운영</li> <li>부산 지역기업 대출금리 인하</li> </ul>
	환율 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금융과 협력한 부산 지역기업 환율 우대 혜택 제공</li> </ul>
	수입업체, 원자재 수입 제조업체 원가 부담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li> <li>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li> </ul>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서비스 시작 및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li> <li>주요 기관·기업과 MOU 체결</li> </ul>
환경 · 에너지	ESS 활용 에너지 신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산에너지특구에 설치되는 에너지 공급 시설과 연계한 ESS 보급 촉진</li> <li>ESS 활용 가상발전소 운영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 및 관련 기업 육성</li> </ul>
	기후테크 산업 기술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학연 연계 기후테크 R&amp;D 클러스터 조성으로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 지원</li> <li>금융지원 체계 구축 및 상용화 기술의 판로 개척 지원</li> </ul>
	변별력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조속한 시행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요금 차등제 수혜 예상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 안 관철 전략 수립</li> </ul>
대외관계	K-방산 수출 확대에 대응하는 연관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J중공업(고속정), SNT모티브 수출 지원</li> <li>부산국방벤처센터와 협업 강화</li> </ul>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따른 재건 사업 참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건사업의 주요 분야인 교통·운송의 항만 건설 관련 지역 기업 진출 지원</li> <li>재건 관련 보건의료 분야 진출 지원</li> </ul>
	미국과의 방산협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J중공업의 미 해군 유지·보수·정비(MRO)사업 진출 지원</li> </ul>
	중국 및 미국 중심의 도시외교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사우스 지역과의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미/아프리카 등 취약한 도시외교 기반 확충</li> <li>부산시 자체 재정을 활용하여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ODA사업 추진</li> </ul>

주: 정책추진 방안별 중요성·시급성을 높게 평가한 것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모색

4 분야별 부산의 정책추진 제안(서술형응답 종합)

- (산업·통상) 매출감소·경영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역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지원 강화

  - 물가상승으로 소비위축과 자영업자 매출감소 악화 등 현안에 대책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 구성'으로 문제별 솔루션을 찾아가는 방안 마련
  - 부산의 비교우위 관광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고 트럼프정부 규제 영향 덜 받는 K-콘텐츠, 게임 산업 등을 육성
- (금융) 고환율 속 원·부자재 등 수입업체 타격 최소화화 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 피해가 확인된 기업과 업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대출이자 및 마케팅비용 지원으로 영업손실 회복을 지원
- (환경·에너지)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별도로 글로벌 친환경·탈탄소 정책 기조 맞춰 중장기적인 정책추진을 계속 유지

  - 화석 연료 사용 증가 예상에 부응하면서도 지역 제조업의 탄소저감 기술·공정 혁신 지원을 확대하며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
- (대외관계) 방산 수출 확대에 대응하는 연관 산업 육성과 글로벌사우스 지역과의 협력 강화

〈산업·통상 분야〉



〈금융 분야〉



〈환경·에너지 분야〉



〈대외관계 분야〉



## Ⅲ

## 부산의 대응방안

## 1 팩토리 투어 전개와 수출기업 무상지원

## ■ 팩토리 투어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유도

- 수출품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제품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경쟁력 보유한 기업을 다수 육성
- 부산의 비교우위 수산가공품(어묵), 커피, 신발, 화장품 등을 고부가가치화·스토리텔링 하고 생산 현장 방문 위한 관광상품과 연결하는 ‘팩토리 투어’ 전개
  - 이탈리아 파르미자노 레지아노 치즈 공장 투어 및 시식(입장료 US\$115)
  - 중국 상하이 소재 세계 최대 커피 로스팅기계와 제과 현장 투어(무료입장)
- 팩토리 투어는 제품 판매액, 수출액 증기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 부문과 연계되어 지역 전체에 대한 소비활성화로 연결
  - 생산자와 국내·외 관광객 직거래는 판매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지역 사회 활성화와 상생을 도모

## ■ 해외 현지 수출 기반 조성하고 초보 수출기업 무상지원

- 전 세계 대상으로 노련한 수출전략 구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경험을 갖춘 수출전문가 팀 구성
- 국가별 전문 수출 컨설턴트에게 수시로 연락해서 상담·자문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개설
- 수출 현지 마케팅 회사와 협력, SNS 인플루언서 활용 등 다양한 판매 채널 활용을 지원
- 수출자가 처음 해외시장 공략하는 경우 자기 부담금없이 전액 공적지원금 지원을 통해 현지 통관·검역조사 및 마케팅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수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

## 〈팩토리 투어 사례〉



파르미자노 레지아노(Parmigiano Reggiano) 치즈공장 투어(www.klook.com)

중국 상하이 스타벅스 투어(www.sohu.com)

**2 높은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악화 가운데 경기 둔화와 민생경제 어려움에 대비**

- 트럼프 정부가 자국 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관세와 감세 부과 정책을 현실화 한다면 2025년 국내 경제성장은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중심의 경기부양책과 물가 안정, 기업투자 촉진을 선제적으로 대응
  - 치솟는 물가는 서민들의 구매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특히 저소득층은 일상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삶의 질에 악영향
  - 기업의 신제품을 개발,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 및 사업전환에 정책지원 함으로써 부가가치 및 혁신 역량 향상에 도달하는 자체 경쟁력을 확보
- 물가 상승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직거래 및 할인 프로모션 확대로 소비 활성화 유도
- 부산시는 가격독점과 불공정경쟁을 단속하고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하며 산업구조조정 강화, 생산 효율성 제고 및 생산비용 절감에 지원 강화
  - 도산하는 기업 종사자와 저소득층에 '물가보조금'을 지급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본생활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 사회보장과 생계지원을 강화
  - 부산 주력산업의 원부자재 공급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원자재 공급의 안정성과 합리적인 공급가격 유도 및 과학적인 재고 관리 등 기업의 공급망 관리 및 재고 관리 강화를 지원

**3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을 통한 원부자재 수입기업의 가격변동 위험 부담 해소**

- 대내외적으로 금리·물가·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된 경기침체로 물가 상승 압력 저하
  - 다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고조되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원자재 또는 중간재 수입기업의 원가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부산시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정착을 선도
  - 납품대금 연동제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
  -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일부 예외조항(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 따라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는 실정

-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율 변동분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 필요
- 제도가 정착되면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중소기업-대기업 간 손실 분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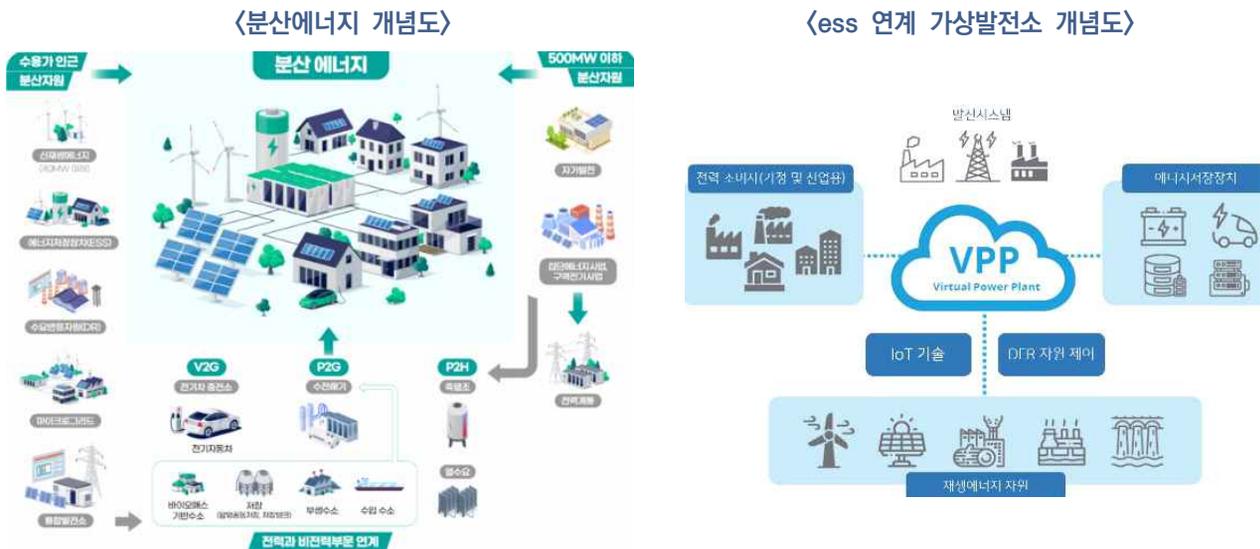
#### 4 K-방산 수출 확대에 대응하는 연관 산업 육성

-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이 NATO의 유럽 내 확장 중단과 미국의 관여를 축소하여 유럽의 안보를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 전망됨에 따라 K-방산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부산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인 풍산(각종 탄약), S&T모티브(각종 총기), HJ중공업(고속정)의 해외 수출 확대에 대응하는 연관산업 육성
  - HJ중공업(구 한진중공업)은 주력 방위산업 분야인 고속정, S&T모티브(각종 총기), 풍산(각종 탄약)의 수출확대를 지원
  - 국책연구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운영하는 부산국방벤처센터와 부산시의 협업을 통해 부산지역 방위산업 연관 기업과 벤처기업 육성 지원
- 부산시는 정부를 대상으로 지역 방위산업 수출 확대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K-방산 수출 정보 공유, 기업 대상 컨설팅·금융지원 및 연구개발 지원을 요청

#### 5 에너지저장장치 활용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촉구

- 에너지저장장치 활용 에너지 신산업 육성
  -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소재 및 부품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라는 부정적 전망과 미국의 대중국 견제로 인한 반사이익 향유라는 긍정적 전망이 공존
  - 한국은 최근 폐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3배 확대 서약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만큼 에너지저장장치 확대를 위한 정책 필요
  - 분산에너지특구에 설치되는 에너지 공급 시설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등 내수 수요를 확대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 필요
  - 분산에너지특구를 통해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운영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 및 관련 기업 육성
  -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상과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산편익에 따른 금전적 보상 지원, 에너지저장장치 특례할인 부활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
  - 에너지저장장치 확대 보급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연동한 전기요금 불확실성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사업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
-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으로 근거가 마련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조속히 추진하여 전력자립도가 높은 부산광역시가 산업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데 유리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
- 현재 논의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안은 지역구분(수도권-비수도권-제주 구분) 및 시행시기 (2026년 소매가격 적용)의 측면에서 부산광역시가 타 시도에 비해 실효성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
-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시 수혜가 예상되는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조속한 정책 시행을 촉구



자료: 에너지경제신문(2025.01.02.), 송전탑 갈등 없애고 新먹거리 자료: KBthink(2023.4.13.), 발전기 없는 발전소, 가상발전소(VPP) '분산에너지시장' 본격 열린다

## 6 미·중·일 중심의 특정 국가 도시외교에서 글로벌사우스 지역으로 협력 확대

-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본격적인 전략경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은 여러 도시들과 협력을 강화해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반을 확보
  - 남미·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의 주요 도시들과 협력관계를 확대·강화
- 부산시 자체 재정을 활용하여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ODA사업 추진을 통해 저개발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 특정 국가에 한정된 자매·우호도시 협력이나 국제교류 활동을 남미·아프리카권까지 확대 추진
- 부산시는 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외교법' 제정을 촉구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도시외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